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

-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

김민호**·오성배***

< 차례 >

- I. 서론
- II.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이유
- III.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현황과 문제점
- IV.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사례
- V. 결론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통합만 강조할 뿐 다양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사회의 맥락을 반영하는 데도 지지부진하다. 본 논문은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을 구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여섯 가지로 제시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고, 제주에서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개발의 방향과 개발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교육, 지역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

* 이 연구는 2008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KRF-2008-B00079)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아울러 이 논문은 필자들 중 한 명이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모형과 추진전략'이란 제목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의 『교육발전연구』 제 26권 제2호(2010. 12.)에 게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다문화교육은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인종, 민족, 언어, 종교, 계층, 성, 장애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 대우를 폐지하고자 한다. “남녀학생 모두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수한 학습자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Sleeter & Grant, 1987)하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대학을 재구조화하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주된 목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은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 ‘다양성 속의 일치’(e pluribus unum)의 정신을 계승(Banks, 2008)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만을 추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통합만을 강조한 나머지 다양성을 잃어버린다면 다문화교육다운 다문화교육을 한다고 말 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 담론과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확산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로 이주해 온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 이주여성, 유학생 그리고 이들 가족들을 온정주의와 동화주의의 입장에서 사회통합, ‘국민형성’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이주민의 인권을 바탕으로 이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시민권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소홀했다(김혜순, 2007; 오경석, 2007; 윤인진, 2007; Martiniello, 2002)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과 정주민을 대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도 큰 관심을 보이지 못했다.

이주민의 시민적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역량을 개발해 정주민과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이주민을 지역사회)의 ‘이방인’이나 손

‘님’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격적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별장’이나 ‘호텔’이 아닌 자신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어야 한다(Sacks, 2007). 그러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살펴볼 때, 지역사회가 이주민만이 아니라 정주민들에게도 더 이상 온전한 의미의 ‘고향’이나 ‘생활공동체’로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산업화와 탈산업화, 근대화와 탈근대화, 그리고 최근 세계화와 정보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 의미의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되어 도시 건 농촌이건 간에 이웃과 전인격적으로 상호 대면하거나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거의 없는 익명사회가 되버렸다. 또 1990년대 중반 지방 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지역사회 안에 정치 민주화의 바람이 불긴 했으나, 여전히 토착 세력이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풀뿌리 시민들이 지역의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자신의 주체적 역할을 발휘해 지역을 보다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적지 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 게다가 중앙 정부가 추진한 지역 불균형 성장 정책,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 등으로 지역경제간 불평등,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 수도권 인구 과밀화 및 농어촌 공동화 등 지역사회 자체의 자생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지역사회라는 장소(place)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지역사회는 자본이나 민족국가 혹은 지구촌처럼 위로부터 추상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구체적 공간이다. 지역사회는 인간성을 추상적이지 않은, 살아있는 ‘구체적 보편(concrete universal)’으로

1) 지역사회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① 지리적인 특정지역의 동일성 ② 그 지리적 동일성을 통한 거주자들 상호간 또는 지역과의 유대 ③ 거주자들 사이의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다(Driskell & Lyon, 2002를 박상옥, 2010에서 재 인용).

인식하는 장소이다. 근대성처럼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 그리고 사회와 자연 사이에 커다란 분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라는 그 경계가 고정돼 있지 않고 늘 열려 있다. 지역사회는 인간과 인간, 사회와 자연이 서로 만나는 일상의 공간이다(Dirlik, 1999). 따라서 사람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을 생산하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및 상황이 학습을 위한 교재인 셈이다(박상욱, 2010).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이주민과 정주민 모두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설령 지역사회가 일정 부분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다문화교육 정책이나 전국 단위의 이주민 인권 운동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의 맥락에 걸맞게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정주민의 지역사회 내 구체적 삶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²⁾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주민을 우리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시민적 권리와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며 나아가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의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성인학습, 지역사회 공동체, 다문화교육 등에 관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여섯 가지로 정리하

2) 본 논문에서는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맥락에 따라 표현을 달리 사용했다.

였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³⁾인 제주지역 다문화관련 유관단체를 방문하여 직접 수업 활동을 관찰하였고, 교육 담당자 및 이주민 수강생들과 면담하여 우리나라 지역 다문화교육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 때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여섯 가지 조건에 비추어 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개념적 준거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II.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이유

1. 학습자의 구체적 삶, 경험적 지식의 반영

모든 교육활동은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학습자의 삶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인간은 일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떠나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학습에 임할 수 있으나, 언젠가는 다시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모든 교육이 인간의 구체적 삶⁴⁾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오히려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

3) '제주국제자유도시'란 2001년 말 종래 '제주도개발특별법'(1991년 제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된 데서 비롯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를 마련하기 위해 등장했다. '국가 개방의 거점'이자 '제주도민의 소득·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제주도, 2002). 그러나 법 시행 10년이 경과한 2011년 현재, 제주도 내 거주외국인은 8,500여명으로 제주도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하다. 한국 거주 외국인 수 120만명과 그 비율 2.5%에 비교할 때, 낮은 수치이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면에서 애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제주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국제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인식을 심는 데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따름이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주관적인 구체적 삶의 현장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또 그러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을 촉진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남미의 민중교육 운동가이자 세계적인 교육이론가인 파울로 프레이리(P. Freire, 1996)는 학습자의 경험적 지식, 민중지식의 교육학적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경험적 지식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객관적 현실을 못 보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 지식은 과학적 오류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근사안적 태도를 부추기는 은밀히 감추어진 이데올로기적 토대이다(133쪽).

민중 지식에 대한 존중은 필연적으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피교육자의 구체적인 지역성은 세계에 관한 그들의 지식이 생성되는 출발점이다. 결국 ‘그들의’ 세계는 세계 그 자체에 대한 일차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135쪽).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주민과 정주민의 다문화적 감수성을 증진시키려면, 이주민이 출발국에서 학습했던 민중지식과 도착국에서 일상적 삶을 통해 새롭게 경험한 지식, 그리고 정주민이 과거에 몸담았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가 정주민의 의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등이 필요하다.

4) 세계화가 국제이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국제이주가 송출국과 유입국에 미친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한 캐슬(S. Castles, 2000: 129쪽)에 따르면, “국제이주는 일반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분석되나, 그것의 가장 큰 영향은 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 송출국에서는 지역사회 내 농업 및 수공업의 붕괴, 성 관계와 가족구조의 극단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유입국에서는 거시 경제적 시각으로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와 사회적 비용과 긴장을 보다 잘 인식하는 지방당국간 갈등이 생겨났다.”

2.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생활세계 확보

학습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지려면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수자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공론의 장'이 요구된다. 모든 교육활동이 일상생활을 전제로 하되 정치나 경제 등, 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학습자 개인의 인간적 성장과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생활세계'를 확보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정치나 경제의 논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이다. 지역사회 안에도 정치나 경제의 논리가 침투해 있으나 정치나 경제의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이들에 저항하여 지역사회 내 생활세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하버마스(Habermas, 1990)에 의하면 국가와 자본은 국민통제와 이윤추적을 목적으로 형성된 '체계'로서 기능적 합리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의 논리를 따른다. 반면에 '생활세계'(Lebenswelt)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왜곡 없는 자연스런 의사소통을 추구한다. 근대 서구의 시민사회의 전통은 바로 생활세계 혹은 공공영역(Öffentlichkeit)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생활세계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면서 곧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전개되면서 서구의 공공영역이 변형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서구 시민사회의 최대 과제는 개인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거나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데만 있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를 뒷받침하는 생활세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도 이주민과 정주민간, 이주민 상호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교육에서는 동화주의에 입각한 일방적 사회통합의 원칙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우리나라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똑

같이 나타난다. 지역사회는 국가나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세계를 제공한다.

3. 중간집단을 매개로 한 학습자의 자율성 보장

시민사회에서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나아가 인간의 창조적 성장은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 국가 권력이나 시장이 전면에서 나서서 개인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개인에게 시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가나 시장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의 역할을 보조 수준으로 제한하려면 국가의 공권력이나 시장은 그 거대한 힘을 가정, 학교, 노동조합, 지역사회 등 '중간집단'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보조성은 무엇보다 중간 단체들의 자율성을 통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한 도움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력으로 무언가를 이루 수 없을 때 제공되고, 언제나 그들의 해방을 목표로 합니다. 책임을 맡음으로써 자유와 참여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성은 인간존엄을 존중하는데, 인간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보조성은 상호 관계를, 인간을 이루는 핵심으로 간주하므로 모든 형태의 온정적 지원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Pope Benedict XVI, 2009: 90쪽).

다문화교육에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국가의 공권력이나 시장의 자본력은 다문화교육기관을 보조하는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시민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도록 국가나 시장은 통제나 감독 등 지나친 개입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4. 공동체적 연대성 실현

학습자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근거한 학습활동의 결과가 개인에 한정되어서도 곤란하다. 인간은 본디 남과 여, 부모와 자녀, 부자와 가난한 자,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직업 등 집단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집단 안에서 자신의 인격적 성숙을 꾀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 문화, 감정, 피부와 종교를 지닌 이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나와 다른 이들이 고통에 빠져있을 때,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잃을 위험에 있을 때 이들을 돕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그 형제들과 더불어 모든 차원에서 사회의 공동선에 공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Ratzinger, 1986: 114쪽).

지역사회는 '다양성'과 '연대성'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이다. 특히 국제 노동이주 및 결혼이주의 결과 한국의 지역사회는 최근 10년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민족 출신들이 자리 잡게 되어, 다문화교육의 이념인 다양성과 연대성을 배울 수 있는 학습의 터전이 되었다.⁵⁾

5) 2011년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1,256,00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5%에 불과하나, 지난 10년간 그 성장 속도는 매우 빨랐다.

5.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의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가 살아 있을 때 국가 및 지구촌 차원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과 맛을 지닐 때 국가 및 인류의 문화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인류가 자연의 세계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문화다양성, 언어 다양성 등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다원주의 모형(the pluralist model)은 모든 문화에는 다른 문화로 환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 제도, 실천 등이 있음을 인정한다. 문화 간 대화와 논쟁은 미리 결정된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모형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자신만의 고유한 목소리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화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다양한 문화와 문명에도 불구하고 문화간 균형적 교환과 의사소통을 통해 세계화에 이를 수 있다고 기대한다 (TMFUN, 2000).

다문화교육은 문화에 대한 다원주의 모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다양성에만 머물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간과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공동체적 연대성과 관련하여 지적했듯이, 최소한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의 공동선을 구현하기 위한 연대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적 게토화(cultural ghetto)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6. 풀뿌리 운동의 개방적 장소 제공

지역사회는 민주성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폐쇄성에 갇혀 지역 토착세력의 힘에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터키 태생의 중국 현대사 연구가인 아리프 디릭(Arif Dirlik)은 전지구화를 유럽중심주의가 주도하는 근대성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비판하였다. 그는 세계사의 서술이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결과물을 산출할 ‘로컬’(local)을 무시하는 것을 우려하고, 세계화를 추동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항 전략으로서 ‘로컬’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로컬을 자명한 공동체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초국가적 경계넘기 논의가 기본적으로 한 국민국가의 로컬과 다른 국민국가 로컬의 연대(translocal)에 집착하고, 다중(multitude)으로 불리는 민중의 연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것 역시 세계화의 한 극단적 형식으로 그런 경계넘기를 관리 감독할 국민국가를 파괴하는 데 일조할 뿐이라는 비판이다.

그리하여 디릭은 전지구화에 대항하는 정치공간으로서 ‘장소’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로컬공간’은 폐쇄적 경계긋기로 로컬 바깥을 배제하거나 시간적 안정성이나 사회적 헤게모니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장소’는 오직 부단한 상호 협조 공간으로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소는 자본주의의 근대성이 침투하지 못한 잔여 영역이나 과거의 불평등과 압박의 장소가 아니라, 자본주의 근대성의 작동 공간에 위치하면서도 전지구화의 장밋빛 전망에 맞서 일상적 삶의 우선권을 재확인하는 민주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디릭은 풀뿌리 운동이 가능하고, 생태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 기반한 정치’(placed-based politics)의 실천, ‘장소에 기반한 사회운동’, ‘아래로부터의 전지구화’라는 실천적 저항을 강조했다(장세룡, 2011; Dirlik, 1999).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에서는 지역사회 내 기득권 세력, 설령 시민사회단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폐쇄적 시도에도 저항해야 한다. 항상 개방적 태도로 이주민과 정주민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다문화

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평등한 삶의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Ⅲ.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현황과 문제점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은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12일까지 대략 한 달간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실시기관을 집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와 2009년 9월 제주다문화가정센터가 주최한 글짓기 대화의 심사 과정 중에 그 곳 대표와 면담한 결과, 2010년 11월 제주이주민센터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들과 견학 방문했을 때 김○○ 센터장의 기관 소개, 그리고 2011년 3월 23일과 4월 1일 제주다문화가정의 한국어교실 참관 및 결혼이주민과의 대화 등을 참고로 작성했다.

특히 앞서 제시한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조건들 - 학습자의 구체적 삶의 반영,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생활세계 확보, 중간집단을 매개로 한 학습자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적 연대성 실현,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전체 사회의 다양성 확보 및 풀뿌리 운동의 개방적 장소 제공 - 을 준거로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의 영구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흡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기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혼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

주민들의 제주 정착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 욕구와 아울러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에 초기 정착을 지나 영구 정착 단계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는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은 단지 기술 훈련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충분한 언어구사능력,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유통과 조세정책 등에 관한 사회과학적 지식 등 매우 폭 넓은 인적자본의 기반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경기 회복 정도, 직업구조,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 역시 많다. 또 취업이나 창업 후 사후관리의 어려움 역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당위성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1〉 제주지역 다문화 관련 교육기관의 다문화교육 내용

구분		프로그램 예시
보편적 가치 이해 프로그램 (민주주의, 인권, 평화, 세계시민 등)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다문화 관련 실무자 연수, 아버지 학교, 한국문화교육, 멘토링
이주민 및 그 자녀들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한국음식교육, 한국문화교육 및 체험, 아동양육교육, 가족통합교육, 아버지학교, 특별한 며느리 제주도민 거듭나기, 쓰레기 분리수거, 지역기관 위치 알기 미술치료, 한자로 배우는 일본어교실, 색종이 접기, 동화책 읽기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 강사 양성, 한지공예
	사회참여활동 지원 프로그램	멘토링, 다문화강사 양성, 지역 봉사활동 참여, 정주민과 함께 하는 노래교실, 풍물교실, 여름캠프, 자조집단육성

또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아버지 학교, 멘토링, 한국문화교육 등은 이주민들의 가족 및 사회적 삶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및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보편적 가치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주민 관련 단체(시설)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교육의 대부분은 주로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자각하도록 돕는 데는 소홀한 편이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 의견 반영 소홀

대부분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소외돼 있다. 거의 모든 다문화교육 기관이 이주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할 뿐 학습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찾기 어렵다.

그나마 '제주다문화가정센터', '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처럼 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들이 나서서 결성한 자조모임의 경우, 이주민 학습자의 의견을 교육프로그램에 일부 반영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들 자조모임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제주 지역만이 특이한 현상이다. 통상 이주민 배우자나 그 가족은 공개적으로 나서기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가 쉬운데, 교육을 받는 참여자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예 다문화교육을 기획 운영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 현상이다. 그 결과 제주다문화가정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비즈공예를 가르칠 때도 외부 강사에 의한 일회성 강의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이 실습기회를 자주 가져 비즈공예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질 좋은

재료를 구입해 완성품을 집안 장식용으로 활용했으며, 장차 수강생의 작품을 상품화하는 것까지도 기대하였다고 한다.

3. 다문화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결여

정부는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면서 이주민과 그 자녀를 위한 교육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문화가정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접근은 미약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기의 가정, 다문화가정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상담 활동 등을 추진 한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가정폭력의 피해 여성이나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이들 여성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변화와 이를 통한 가정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평상 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기보다 가정 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 그 문제를 사후 수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았다.

부부간의 문제는 물론이고 자녀 양육 문제나 부모 봉양 문제를 사회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여성의 인권, 여성의 사회참여 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가정 스스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력은 점차 약해지고 가정의 문제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도 없지 않다.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할 한국인 예비 남편 대상으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제주외국인쉼터가 공동주최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학교, 다문화가정 캠프 등은

가정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4. 다문화교육 대상의 편중으로 연대성의 정신 확산 결여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아래 <표 2>가 보여주듯이 2006년 2,645명에서 2011년 8,499명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표 3>이 보여주듯이 제주도민 중 외국인의 비율이 2008년 0.9%에서 2011년에는 1.5%로 증가했다.

<표 2> 연도별 제주도내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06년	2,645	1,391	1,254	1,744	911	833	901	480	421
2007년	4,015	2,156	1,859	2,694	1,392	1,302	1,321	764	557
2008년	5,052	2,719	2,333	3,372	1,702	1,670	1,680	1,017	663
2009년	6,941	3,673	3,268	4,885	2,497	2,388	2,056	1,176	880
2010년	7,343	3,781	3,562	5,195	2,606	2,589	2,148	1,175	973
2011년	8,499	4,371	4,128	5,925	2,934	2,991	2,574	1,437	1,137

* 출처 : 2009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09. 4. 30.기준)
2010년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2009. 12. 31.기준)
2011년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2011. 4. 1.기준)

제주지역 이주민단체와 이주민지원시설을 방문 조사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 <표 3>이 보여주듯이 제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중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이주민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등 일부 이주민단

체만이 이주노동자 대상 상담 활동, 한글 교실 운영 등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표 3〉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90일 초과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국인 주민 (불법체류자 포함)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국제 결혼 가정 자녀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전국	201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3%)	558,538 (전체 외국계주민의 48.0%)	181,671 (전체 외국인주민의 16.0%)	121,935 (전체 외국인주민의 10.7%)	80,646 (전체 외국인주민의 7.1%)	50,251 (전체 외국인주민의 4.4%)	146,242 (전체 외국인주민의 12.8%)
	2011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5%)	562,946 (전체 외국인주민의 43.7%)	211,458 (전체 외국인주민의 16.7%)	151,154 (전체 외국인주민의 11.9%)	86,947 (전체 외국인주민의 6.8%)	83,825 (전체 외국인주민의 6.6%)	137,370 (전체 외국인주민의 10.9%)
제주도	2008년 (제주 전체인구의 0.9%)	1,771 (제주 외국인주민의 35%)	1,201 (제주 외국인주민의 23.7%)	734 (제주 외국인주민의 14.5%)	532 (제주 외국인주민의 10.5%)	-	-
	2009년 (제주전체인구의 1.2%)	2,240 (제주 외국인주민의 32.3%)	1,444 (제주 외국인주민의 20.8%)	1,180 (제주 외국인주민의 17.0%)	796 (제주 외국인주민의 11.5%)	239 (제주 외국인주민의 3.4%)	1,042 (제주 외국인주민의 15.0%)
	2010년 (제주전체인구의 1.3%)	2,533 (제주 외국인주민의 34.8%)	1,609 (제주 외국인주민의 21.8%)	1,200 (제주 외국인주민의 17.6%)	857 (제주 외국인주민의 11.7%)	252 (제주 외국인주민의 3.4%)	772 (제주 외국인주민의 10.5%)
	2011년 (제주전체인구의 1.5%)	2,917 (제주 외국인주민의 34.3%)	2,007 (제주 외국인주민의 23.6%)	1,580 (제주외국인주민의 18.6%)	899 (제주외국인주민의 10.6%)	351 (제주 외국인주민의 4.1%)	631 (제주 외국인주민의 7.4%)

*출처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행정안전부(2010. 1.)
 2009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09. 4. 30.기준)
 2010년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2009. 12. 31.기준)
 2011년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2011. 4. 1.기준)

사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주 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2-3년 후 본국으

로 돌아가기에 한국어 교육이나 일상생활 및 법률에 관한 지식 등이 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이 노동 현장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겪는 고통과 불이익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08. 4. 2.),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등 지원조례(2008. 5. 9.) 등에서 제주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입법화했으나, 사실 '거주외국인등'을 거주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자녀로 한정하여, 미등록 노동자나 그 자녀들은 정책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대성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 노동자, 그리고 이들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려면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내 정주민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적응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주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매우 부족하고 또 일부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머물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문화가정 가족 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매우 적었다. 제주외국인 쉼터의 결혼이주 여성 남편을 대상으로 했던 '아버지 학교', 국제가정문화원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미술치료, 재미있는 한자로 배우는 일본어 교실, 색종이 접기 등이 있다. 일반인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외국인쉼터의 결혼이주여성의 멘토(친정어머니) 훈련 프로그램, 이주민과 정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축제나 소풍, 캠페인 형태의 행사가 전부라 할 정도이다. 이같은 현상은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아래 <표 4>와 같이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 44개 가운데 결혼 이민자와 이주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각각 97.7%, 79.5%인 반면에 한국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20.5%에 불과했다.

<표 4> 다문화교육 정책의 대상

정책대상	결혼이민자(가족)	이주노동자(가족)	탈북자(가족)	한국가정
	43 (97.7%)	35 (79.5%)	6 (13.6%)	9 (20.5%)

* 출처 : 성상환·김명정(2009),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자료 분석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과 학교교육(제1차 다문화교육 전문가 협의회 자료집), 26쪽.

다른 한편,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역시 소수에 불과했다. 국제가정문화원의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한글교실(정주민 할머니들의 불만으로 실패함), 노래교실, 풍물교실이 있고, 이주민 가족이나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이주민센터의 가족통합교육, 제주외국인쉼터의 가족캠프 등이 있다.

5. 제주지역의 특수성 반영 부재

앞서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주지역의 다문화교육이라면 제주지역의 맥락을 반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주지역 이주민 대상 한글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제주어를 가르치는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제주어를 반영한 한국어 교재도 없다. 제주어는 고사하고 제주지역의 자연, 제주사회와 문화, 그리고 역사 등 제주지역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제주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한국어교재조차 개발돼 있

직 않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많은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제주 거주 이주민에게 적합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학적 반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 강사들이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나름의 학습자료를 준비해서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가르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등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면서 비공식적으로 제주어와 제주문화를 습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습득하도록 방치하는 일은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넘어 이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개방 정책을 펴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지역 사회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포기하는 일과도 같다.

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민간단체의 참여와 자생력의 상대적 열세

아래 <표 5>가 보여주듯이 제주지역에서 국가 혹은 지자체 주도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은 많은 반면에 지역 민간단체 주도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결과다. 게다가 몇 민간단체의 다문화교육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체제 내에 포섭돼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민간단체의 다문화교육이 제주지역에서 자리 잡는 데는 시민사회 영역의 성장과 함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2세, 3세 등이 지역사회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시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표 5〉 제주지역 다문화교육기관 현황

설립주체/ 지역		제주시 지역	서귀포시 지역	
학교 다문화교육		보육시설 373개 유치원 67개 초등학교 61개 중학교 27개 고등학교 18개 특수학교 2개 대학 4개	보육시설 129개 유치원 42개 초등학교 45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2개 특수학교 1개 대학 1개	
학교 밖 다문화 교육	공공기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사회종합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민간 단체	이주민단체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의국인협회 국제가정문화원 제주다문화가정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이주민지원 시설	제주YWCA 제주국학평화봉사단	
	대중매체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신문, 방송, 인터넷 등	

한편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해당 단체와 모 단체간 관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주민단체'는 제주다문화가정센터를 제외하곤 모두 다 종교기관이 설립 운영하고 있고, 이주민단체의 주요 사업을 결정할 때 이사회 등과 같은 상급조직의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주민지원시설'인 복지관 역시 정부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기에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인 제주다문화가정센터가 자생적 의사결정구조를 지녔다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회비만을 내는 일반회

원과 이사회비를 내는 이사회원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르다. 가부장제적 전통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의 목소리가 결혼이주여성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다.

또 제주지역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재원 현황을 보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주민 지원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이주민단체의 경우 대부분 자체 재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자체 재원 확보 정도에 따라 이들 이주민 단체간 재정자립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인다. 서귀포이주민센터의 경우 간사 인건비조차 확보하지 못해 상근 간사 없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모법인 소속 제주이주민센터의 경우 정부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돼 자체 재원보다 정부 지원금의 비중이 훨씬 크고, 사업 예산 그 자체도 연간 수억원대에 이른다. 반면에 이주민 지원을 부수적 목적으로 지닌 이주민 자원관련 복지관들의 경우 직원 인건비 등 경상비를 애초부터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은 대체로 외부 공공기관이나 기금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다문화 관련 사업비의 90%를 외부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제주외국인쉼터의 경우 매달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상당수의 후원회원을 확보해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의 자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상근직원 수와 이들의 처우가 각양각색이다. 상근직원이 전혀 없는 경우로부터 5명 이상의 직원을 지닌 경우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크다. 상근직원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텐데 이마저 부족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상근자 몫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있기도 하다. 또한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경력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반면에 이주민단체 직원의 경우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처우도 열악하다.

다만 종교적 헌신성이 이를 보완해 그나마 다행이나 상근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끝으로 제주지역 다문화 관련 단체간 네트워킹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청과 교육청 간, 도청 내 부서 간⁶⁾, 도청과 민간단체(도가 지정하지 않은 단체 포함) 간, 민간단체(도가 지정한 단체, 도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등) 간 네트워킹이 부족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에 초점에 두고 다문화가정-학교-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체제 부족하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이 늘자 이주민 중에는 여러 단체를 순회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쇼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느 한 단체에 속해 자신의 역량 개발에 진력하기보다 여기저기 다니며 정부에서 퍼붓는 물질적 지원을 받아먹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행사로 인해 이주민들이 '동원되기에' 바쁘다.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 이주민들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소홀한 셈이다.

IV.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사례

앞서 연역적으로 논의한 다문화교육의 지역화에 대한 필요성과 제주

6) 결혼이민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08. 4. 2.)」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가, 이주노동자는 경제정책과가, 또 이들 모두를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등 지원조례(2008. 5. 9.)」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가 관할하고 있다.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해당 부서,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역시 다문화교육에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내 다문화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부처가 여러 개로 나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일선 다문화교육관련 단체의 입장에서는 상대해야 할 행정부서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지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귀납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과 사례를 지역사회교육의 관점에서(Longo, 2007 참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생활세계를 우선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지역주민의 생활세계를 우선한다. 이에 비해 중앙집권적 다문화교육은 국가의 정치적 안정, 사회적 약자의 사회통합, 시장의 요구에 따른 인재 양성 등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동원하고 지역사회 내 권력을 형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지역성'(localness)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내 관계를 재설정하고 지역사회의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서 지역성이란 그들 지역 주민 자신의 때와 장소에 맞게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고, 지역주민이 있는 곳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실천가는 지역 주민들의 삶, 그들의 역사, 그들의 관계, 가족·이웃·지역사회·문화 등의 특징, 그들을 둘러싼 물리적 세계 등 참여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주변을 둘러보기, 지역의 세탁소, 가게, 술집, 학교 등을 방문하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의 조직들에 대해 귀 기울이고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에 충실한 다문화교육은 굳이 교실 수업 형태의 비형식(nonformal) 학습만이 아니라, 지역운동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정에 참여하는 무형식(informal) 학습도 가능하다(김민호, 2003 참조). 다음 <표 6>은 지역주민의 생활세계를 우선하는 비형식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사례이다.

〈표 6〉 지역주민의 생활세계를 우선하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

강좌명	<국제이주와 제주 시민의 역할>
대상	제주지역 일반 시민 30명
주요 내용	국제이주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및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학습
교육 형태	강의 및 소그룹 세미나 (이주민과 만남의 날에는 3명의 이주민을 강사로 초청)
실시 기간	주 1회, 총 10회, 20시간 (1회 2시간)
실시 일시	해당 기관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마련하되,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좋은 저녁 시간 고려.
개발 과정	국제이주의 유형, 원인 및 영향/ 국제이주와 국제공동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권/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이주민 정책/ 제주사회 의 현실과 이주민의 삶/ 제주지역 이주민단체(시설)의 이주민 프로그램/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방법/ 이주민과 만남의 날 참여 및 그룹별 토론/ 그룹별 소감 및 제주 시민으로서의 실행계획 발표
필요 교사 인원	12명
교육 담당 교사	- 각 주제별 전공자 8명 (전공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이주민 3명 (한국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결혼이주민 1명, 이주노동자 1명, 유학생 1명) - 주제별 강의 진행 및 이주민과의 만남, 토론, 발표 진행자 1명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주민단체 실무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의 자)
교육 자료 및 교재	각 주제별로 강사가 집필하되, 강의 종료 후 교재화

2.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적 실천가가 주도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보다는 지역의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잠재력을 믿고 이들 주도 하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다문화교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이 주도하기보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다문화교육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 가치에 앞서 공적 가치를 만들 수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지니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게 되며, 지역사회를 조직해 내적 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 이해 등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을 습득하며, 투표와 캠페인 및 입법 청원 등의 정치적 행위, 그리고 공적 이슈에 대해 대화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무관하게 자신의 철학에 따라 자유롭게 다문화교육 활동을 전개하려면 시민사회를 지원해 주는 다수의 후원회원을 확보해야 한다. 든든한 기층조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시민단체나 기관은 매우 적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나 기관은 시민 후원자들이 전혀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나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때 시민사회 단체나 기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과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자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의 재정적 지원 때문에 시민사회 단체나 기관이 고유의 정신을 잃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의 팔다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할 주체세력으로 '민주적 습관'을 지닌 다문화교육 '실천가' 역시 육성해야 한다. 민주적 습관이란 다문화교육 관련 활동을 전문가의 이론이나 기법이란 외적 잣대가 아니라 실무자 자신 스스로 기준에 비추어 내적으로 반성하는 것이고, 다문화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을 연결하는 것이며, 다문화교육을 단지 교실에 가두어 두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상적 삶의 터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 커피숍, 세탁소, 식당, 회사, 도서관이나 박

물관 등의 공공기관, 레크레이션 센터, 운동장, 주민센터, 종교기관, 지역 사회 조직, 그리고 문화적 예술적 행사조차 다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다음 <표 7>은 다문화교육 실천가를 위해 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이다.

<표 7> 다문화교육 실천가 연수 프로그램 (예)

강좌명	<다문화교육 실천가 연수>
대상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사업 관련 실무자, 강사 및 교원
주요 내용	다문화사회 속에서 이주민과 정주민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법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기관단체 간 유대를 강화함
교육 형태	숙박형 이론 및 체험 교육
실시 기간	3박 4일
실시 일시	하계, 동계 방학 중 주말 이용
개설 과정	유관단체 실무자 과정 (30시간) : 시민운동과 시민교육/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이주민정책과 사회 복지/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유학생·탈북자의 삶/ 제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방법
	이주민 출신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재교육 과정 (30시간) : 이주민의 정체성과 사회참여/ 모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 한국의 교육제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한국의 교육문화/ 교수방법/ 프리젠테이션/ 교직사회와 교육 관련 법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직무 연수 (30시간) : 국제이주의 유형, 원인 및 영향/ 국제이주와 국제공동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문화 시민권/ 한국 및 다른 나라의 이주민 정책/ 제주 사회의 현실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삶/ 다문화학교 프로그램/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방법
필요 교사 인원	과정별 약간 명
교육 담당 교사	해당 주제의 박사급 전공자, 다문화교육 정책, 실무 혹은 교육 관련 경험자
교육자료 및 교재	공공 및 민간 기관 발행 시민단체 실무자 연수 교재, 교원 연수교재 등 참조

3. 이주민과 정주민을 능동적 학습자로 간주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특정 정책집단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다문화주의적 가치와 지식 체계를 전달한다. 변화해야 할 대상은 지역사회 내의 이주민만이 아니라 정주민이기도 함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표 8>처럼 다양한 조건의 결혼 이주민과 그 가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다문화가정 내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표 8> 다문화가정 내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예)

강좌명	<다문화가정 하나되기 가족놀이 제주캠프>
대상	일반다문화가정, 이혼다문화가정, 조손다문화가정, 한부모다문화가정
주요 내용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가 함께 캠프프로그램에 참여
교육 형태	탐티칭, 체험학습
실시 기간	2박 3일(금, 토, 일요일)
실시 일시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이용
개설 과정	가족간 의사소통 기술, 엄마 나라 문화학습 및 음식만들기, 가족과 함께 하는 제주 자연체험, 공동체 놀이, 솜씨예식
필요 교사 인원	5명
교육 담당 교사	레크레이션 지도사, 제주생태전문가, 집단상담, 한국문화, 가족관계학 전공자
교육 자료 및 교재	여성가족부 발간 다문화가정 교육 교재 및 강사가 자체 개발한 강의안

또한 다음의 <표 9>처럼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스스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정립하고 다른 다문화가정과 협력하고 연대성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다음 <표 10>이 보여주듯이, 지역사회 내 일반인과 이주민 사이의 연대성(일반인의 이주민에 대한 박애나 자선 수준의 접근 지양)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표 9> 다문화가정의 정체성 및 다문화가정 간 연대성 증진 프로그램 (예)

강좌명	다문화가정 부모 인문학 아카데미
대상	다문화가정 부모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 가능한 사람
주요 내용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교육
교육 형태	팀티칭
실시 기간	8주 24시간 (주1회 3시간)
실시 일시	연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활용)
개설 과정	이주민학, 모스트모더니즘, 민족음악과 미술, 이주신학, 이주사회학, 결혼과 가족의 사회학, 교육학, 생명윤리
필요 교사 인원	8명
교육 담당 교사	대학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 자료 및 교재	강사의 강의안

<표.10>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예)7)

강좌명	<정주민과 함께 하는 결혼이주민 수공예 직업훈련 프로그램>
대상	결혼이주여성 15명, 한국정주여성 5명 (계) 20명
주요 내용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하는 직업훈련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경제적 소득 증진과 나아가 취업 혹은 창업을 돕고,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게 한다.

7) 이 프로그램은 제주외국인센터가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한국여성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등이 후원하는 '2011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

교육 형태	교실 내 강의 및 가내 실습 ※ 이주민 3명 정주민 1명이 조문 편성하여 운영, 상호 대화를 통한 조언 및 격려 ※ 가내실습을 통해 만든 제품은 상품화하여 판매, 생산자에게 수익금 배당
실시 기간	주 1회 16주, 1회 3시간 (계) 48시간
실시 일시	2011년 6월 19일 - 11월 27일
개설 과정	오리엔테이션 1주 3시간, 직업소양과정 1주 3시간, 실기교육과정 (뜨개질 7주 21시간, 한지공예 6주 18시간) 13주 39시간, 마케팅 과정 1주 3시간
필요 교사 인원	5명
교육 담당 교사	소비자경제학, 디자인 전공 교수 각 1명, 뜨개질 및 한지공예 전문강사 각 1명, 마케팅 전문가 1명
교육자료 및 교재	이론 교육은 유인물, 실기교육은 토틸, 한지 및 기타 소모품 구입 활용

한편 다문화교육의 교육자는 다문화교육대상자들과 '상호 교육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주민들을 무능함과 무지함을 전제로 교육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파악하던 방식(education for people)에서 벗어나, 이들의 내적 잠재력과 감수성을 믿고 이것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이들과 함께 하는 교육(education with people)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주민들을 수동적 '고객'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생산자', '창조자'로 믿어야 한다. '인식하지만' 이해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다문화교육 실천가가 '느끼지만' 항상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다문화 관련 주민들과 유기적 결속을 이루는 것이다. 예컨대 폭력, 십대 임신, 인종주의, 교육불평등 등의 공적 주제들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학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팀을 구성해 선택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지역사회 내부의 권력, 집단간 연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분석하고 핵심 관계자와 공적 관계를 맺게 된다.

4. 지역사회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지역사회의 언어, 문화적 전통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세계시민이기 이전에 구체적인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적합성 제고 및 다양화를 모색한다. 예를 들어 다음 <표 11>처럼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한글교육 프로그램에서 오직 중앙정부 내 주요 부처 몇몇 대학이 개발한 전국 이주민 대상의 표준교재를 활용하기보다, 이를 참조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가족, 일터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실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해하는 것이다(지역사회의 방언을 포함하되, 농촌/어촌/산촌 혹은 소도시/중도시/대도시 등의 생활여건, 일터의 종류와 여건, 독특한 가족 구성 방식과 그에 따른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구성).

<표 11>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예)

강좌명	<결혼이주민 대상 한국어 및 제주어 교육 초급과정>
대상	결혼이주민 (한국거주 1년 이내)
주요 내용	제주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제주어를 습득하여 가족 및 지역주민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
교육 형태	교실 교육이되, 상황중심 언어 학습 과정 운영
실시 기간	6개월 과정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반(10시 - 12시 30분) 혹은 오후반(1시 30분 - 3시)
실시 일시	매년 1월, 7월
개설 과정	상황중심으로 한국어와 제주어를 동시에 가르침
필요 교사 인원	2명 (오전반 1명, 오후반 1명)

교육 담당 교사	제주어와 한국어 교육이 가능한 한국어교육 자격증 소지자
교육 자료 및 교재	중앙정부가 개발한 한국어 교재를 원용하되 제주지역 현실에 알맞은 교재 자체 제작 (제주의 관혼상제, 가족문화, 농업, 어업, 관광, 자연 등 관련 제주어 반영)

5. 학습자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단지 교실 형태의 학습에 머물지 않는다. 지역 사회 전체가 배움터이다. 생활 장면 곳곳에서 다문화 학습을 전개한다. 나만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운다. 이주민이 교실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 혹은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엿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생활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과 사회적 효능감을 습득하는 것이다. 다음 <표 12>는 초기 결혼이주 여성을 돕는 데 참여하도록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을 멘토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12> 제주지역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프로그램 (예)

강좌명	<다문화가정 부모 멘토 양성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대상	다문화가정 부모로서 인문학 아카데미 이수자
주요 내용	다문화가정 부모가 직접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멘토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통해 양성된 다문화가정 부모가 직접 다문화가정의 멘토가 됨
교육 형태	팀티칭
실시 기간	6주 12시간 (주1회 2시간)
실시 일시	매년 6월 - 7월, 11월 - 12월
개설 과정	멘토링의 이해, 이주 사회학, 성인상담, 또래상담, 한국사회론(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 제주사회론

필요 교사 인원	6명
교육 담당 교사	멘토링, 상담,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교육학 전공자
교육 자료 및 교재	멘토링 및 다문화사회 관련 교재를 참조하여 강사가 준비

6.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교육의 지역화는 지역 내 기관, 단체들을 전문성이 부족한 결핍된 존재로 보기(community deficits model) 보다, 자기 나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이들 간의 개방적 네트워킹을 통해(community assets mapping) 지역사회 다문화교육의 역량을 배가시킨다. 전자는 전문가의 입장, 외부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폐허가 된 건물, 약물 남용, 조직 폭력 등의 문제를 강조하는 반면에, 후자는 지역사회 내부 개개인의 능력 목록(예: 기술, 재능 등), 시민사회(예: 교회, 클럽 등), 지역의 기관(예: 학교, 기업체 등) 등에 주목한다. 전자는 사람을 문제가 있어 교정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나, 후자는 사람을 능력이 있고 창조적인 시민으로 인식한다.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구축을 통해 국가의 동화주의나 시장다문화주의에 앞서 다문화가정, 다문화학교 및 다문화 지역사회의 자생력 확보 및 개방적 상호연계 체제 구축을 모색한다.

〈표 13〉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단체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예)

사업명	제주지역 다문화교육 포럼
대상	제주 및 국내외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실무자
주요 내용	다문화교육 이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
형태	영역별 주제발표,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실시 기간	연 2회, 1회 1일 5시간
실시 일시	매년 1월, 8월
주요 영역	다문화교육 이론 영역, 프로그램 개발 영역, 기초조사 영역 등
참여 인원	30명 - 50명
담당 인원	포럼운영 담당자 1명, 매회 영역별 주제발표자 각 1명 계 3명, 토론자 각 2명 계 6명, 사회자 각 1명 계 3명, 총 13명
재원	교육청 및 외부 기관

V. 결론

본 논문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교육이 학습자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결과, 이주민과 정주민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실 근대화 이후 지역사회의 빠른 변화, 불균형적 성장 등으로 지역사회가 학습활동의 장으로 기능하는데 많은 외적 장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여전히 지역주민의 학습활동의 장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내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다문화교육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실행되어야 할 여섯 가지 이유를 탐색했다. 첫째, 모든 교육은 학습자의 구체적 삶을 반영해야 하는 데, 이주민과 정주민의 지역사회 내 경험이 충분히 다문화교육의 소재가 된다. 둘째, 어떤 교육이든 교수자와 학습자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확보해야 하는 데, 지역사회 내 대면적 인간관계가 다문화교육을 촉진한다. 셋째, 지역사회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중간집단으로서 학습자의 자율성을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한다. 넷째, 지역사회

는 규모와 내적 기제 면에서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공동체적 연대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공간이다. 다섯째, 지역사회는 고유한 문화전통을 지니고 있어 다문화교육의 다양성 확보에 원천이 된다. 여섯째, 지역사회는 지역주민의 풀뿌리 운동의 개방적 장소로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에 입각한 다문화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 다문화교육은 지역사회의 장점을 살려 이주민과 정주민의 교육적 성장을 돕는 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 교육내용면에서 볼 때, 이주민의 영구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고, 다문화가정의 기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소홀하며,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교육주체로서 민간단체의 참여와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교육대상 역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 편중돼 이주노동자나 정주민 대상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셋째, 교육 운영 면에서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의견 반영이 소홀했다.

다양성과 사회통합이라는 다문화교육 본래의 이념을 구현하려면,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추상적 지식보다 지역주민의 생활세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사회경제적 특성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며, 학습자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교육주체 및 대상 과 관련하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다문화교육 실천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시장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주노동자와 정주민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쓴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이주민과 정주민을 다문화교육의 능동적 학습자로 간주하고, 지역사회의 가용가능한 자원을 네트워크하여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

서는 '지역사회기반 다문화교육'의 논리와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토대로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하였다. 향후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현장과의 교류를 통해 기 개발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수정하고 현실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호(2002), 「시민사회 주도의 지역 평생학습 문화 형성 방안」, 『평생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평생교육학회.
- 김민호(2003), 「지역운동 속의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 - 제주시 화북주공아파트 운동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 김민호(2010), 「다문화교육의 지역화 모형과 추진전략」, 『교육발전연구』, 제26권 제2호,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 김혜순(2007), 「서론,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모색 : 세계화 시대 이민의 보편성과 한국의 특수성」,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동북아시아 위원회 용역과제 07-7).
- 박상욱(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제16권 제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 성상환·김명정(2009),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자료 분석 및 문제점」.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교육과 학교교육(제1차 다문화교육 전문가 협의회 자료집).
-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서울: 한울.
- 윤인진(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사회학회.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동북아시아위원회 용역과제 07-7).
- 장세룡(2011), 화제의 인물-아리프 달릭 전 듀크대 교수, 교수신문, 2011. 4. 4.
- 제주도(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2002-2011.
- Banks, J.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 Pearson Education, Inc, 모경환 외(공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수정판)』,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Castles, S.(2000), *Ethnicity and globalization : From Migrant workers to transnational citizen*, London: Sage Publications.
- Dirlik, A.(1999), “Placed-based imagination : globalism and the politics of place.” *Review* 22(2).
- Freire. P.(1996), *Pedagogy of hope: Reliving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Inc., 교육문화

- 연구회(윤킴)(2002), 『희망의 교육학』, 서울: 아침이슬.
- Habermas, J.(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Verlag, 한승완(윤킴)(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조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Longo, N.V.(2007), *Why community matters: connecting education with civic lif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artiniello, M.(1997),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윤진(윤킴)(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서울: 한울.
- Pope Benedict XVI (2009), *Caritas in Veritate*, 한국천주교주교회의(2009), 『진리안의 사랑(교황 베네딕도 16세의 회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Ratzinger, J.(1986), *Instruction on Christian Freedom and Liberation*. 강대인(윤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훈령』,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자유와 해방』,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Sacks, J.(2007), *The home we build together : Recreating societ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Ltd. 서대경(윤킴)(2009). 『사회의 재창조: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찾아서』. 서울: 말글닷컴.
- Sleeter, C.E. & Grant, C.A.(1987),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7.
- The Millennium Forum of the United Nations(2000), *Cultural diversity and globalization*, A document for reflection on the subtheme of 'Culture' from the Millennium Forum of the United Nations.
<http://www.barcelona2004.org/servicer/global.nsf/public/discussio-eng>

기관 방문 면담 자료

- 국제가정문화원 2009. 1. 15.
- 동제주사회복지관 2009. 2. 11.
- 서귀포이주민센터 2009. 2. 12.
-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2009. 2. 12.
- 제주다문화가정센터 2009. 9.; 2011. 3. 23.; 2011. 4. 1.
- 제주의국인센터 2009. 2. 12.

- 제주이주민센터 2009. 2. 5.; 2010. 11.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2008. 4. 2.)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외국인등 지원조례(2008. 5. 9.)

통계 자료

- 제주도 2009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2009. 4. 30.기준).
- 제주도 2010년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2009. 12. 31.기준).
-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2010. 1.)

Abstract

Directions of community-based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Kim, Min-Ho* · Oh, Sung-Bae**

Korean government have not focused on increasing of diversity, but on social integrating by multicultural education in perspective of assimilation ideology. And it also passed over 'the context of community'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constructed the six reasons why multicultural education take on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First, we must teach migrants and residents cultural competencies based on the experiential knowledge of them in the community. Second, we must have a free communication space between teacher and learner, which is not controled by state and market. Third, we must guarantee the autonomy of middle groups, that is a family, firm, or trade union etc. Forth, we must have a solidarity not only in the level of state, and world but also in the level of community. Fifth, we must keep on reserving cultural diversity. Sixth, we need the democratic place of grassroots movement toward globalization from below.

This study examined the challeng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y six criteria mentioned above. And then This study suggest the directions and examples of community-based

* Professor,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communit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교신 : 김민호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4810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육학과
(E-mail: minho@jejunu.ac.kr 전화 : 064-754-4892)

논문투고일 2011. 06. 20.

심사완료일 2011. 07. 27.

게재확정일 2011. 08. 17.